



BUSINESS GUIDE

특별기획

장기적인 물가 압력 경제 구조 변화 요구한다

출처 : LGERI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은 OECD 국가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이 존재한다. 먼저 대외요인으로 경기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금융완화 정책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중국에서 생산성을 초과하는 빠른 임금 상승이 이뤄지면서 인플레이션 수출이 이어지리라는 점과 신흥국 성장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의 추세적 상승이 전망된다는 점 또한 장기적 물가불안 요인이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에 비해 향후 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우리 경제가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를 지녔으며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불완전경쟁 시장구조와 비효율 때문에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하방경직적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과 같은 수요조절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대외경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서비스부문의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자극하고 수요를 창출하는 등 경제의 구조변화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화두는 물가이다. 작년 4분기부터 한파, 구제역 등 각종 공급충격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면서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반기 들어 공급충격이 완화되면 다소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대외변수인 유가의 향방 또한 불안이 가지 않는 모습이다.

빠른 물가 상승세가 이슈화되면서 물가 수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 자체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각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물가를 어떻게 보아야 하나 하는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물가수준을 국제비교를 통해 가늠해 보고 장기적으로 물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대내외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 후 물가 안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이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낮은 편에 속한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물가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존재한다.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중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추세적 상승 등이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대외적 물가 상승 요인이다. 대내적으로도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구조 및 대외의존도, 불완전경쟁 시장구조와 비효율 등을 꼽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중장기적 물가 불안 요인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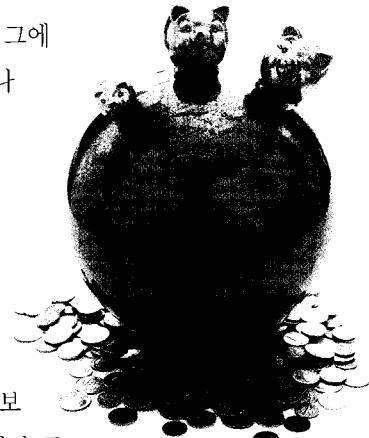
■ 대내요인 1 :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생산성

이하에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를 위협하는 대내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 하나로 우선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과 이에 비해 높은 임금 상승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는 1990년대

초에 비해 2.6배 이상 향상되었다. 1993년 서비스업 1인당 명목 부가가치는 14.4(백만원)에서 2010년에는 37.7까지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업 부문의 꾸준한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1993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거의 같은 수준에 있었지만 이후 제조업의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면서 2010년에는 서비스업 생산성이 제조업의 47%에 불과하게 되었다.

자본집약화에 따른 대량 생산과 그에 따른 비용 절감이 수반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은 눈에 띠게 개선되었다. 교역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환경에 무제한 노출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어냈다. 반면 비교역제 부문인 서비스업은 경쟁에의 노출도가 낮고 각종 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측면이 크다. 이런 격차가 존재함에도 국내적으로는 노동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서비스업 부문은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임금 수준이 제조업에 맞춰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재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를 Balassa-Samuelson 효과라고 부른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에서 교육(2009년 기준 11.1%), 통신(6.0%), 익식 및 숙박(13.3%) 등 주요 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선진국들에 비해 2배 안팎 높은 곳이 특징이다. 아직까지 서비스 부문 물가 수준 자체는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고 그 동안 상품 가격에 비해 억눌려온 측면이 있지만 향후 이 부문의 빠른 임금 및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성이 높다.



■ 대내요인 2 : 높은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과 대외 의존도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낮은 에너지 효율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장기적인 물가 불안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개선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에너지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우리나라가 0.298(toe/천달러)로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면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단위가 높은 이유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제조업 부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총부가가치 대비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8.1%로 OECD 평균인 16.0%에 비해 12%p 이상 높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에는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다 보니 향후 값싼 에너지가 소멸되어 감에 따라 성장을 위해 더 높은 물가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환율 요인으로 인해 경기 하강기에도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환율 변동에 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또한 불안 요인 중 하나이다. 모형의 설정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소비자물가에 총수요압력 다음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환율로 나타난다. 총수요압력과 환율, 유가가 1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는 각각 0.9%, 0.6%, 0.2%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히 물가와 환율의 상관계수만 보아도 0.65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환율은 물가를 구조적으로 높이는 요인이라기보다 대외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징적인 것은 환율 요인으로 인해 경기 하강기에도 물가가 급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 4번의 경기 하강기



가운데 국내 요인에 의해 발생한 카드 사태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대외 요인이 주도한 경기 침체였다. 세계경기 하강이 대외 금융불안과 결합하면서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켰고 이는 곧바로 국내물가 불안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로 경기 회복 및 상승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요 압력이 발생하여 환율이 오를 때의 물가 상승폭 만큼 떨어지진 않는다. 오히려 물가가 소폭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외환경 변화와 환율 변동에 따라 물가도 함께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대내요인 3 : 불완전 경쟁 시장구조와 비효율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물가를 장기적으로 우려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불완전한 경쟁 및 시장구조 등에 따른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꼽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의 세미나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물가가 오를 때 쉽게 오르고 내릴 때 잘 떨어지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선진국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한다. 선진국 주요 품목들의 가격 변화는 상하방으로 모두 움직이는 톱니바퀴식 추이를 보이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계단식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물가가 하방경직적인 이유로 낮은 경쟁압력, 왜곡된 가격결정 구조, 지대 추구행위 등이 꼽힌다. 시장에 비효율성이 존재하면 유통구조가 경쟁적이지 못하여 기업들이 가격 설정자(price setter) 역할을 함으로써 가격의 하향 압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리지 않고 잉여를 흡수하게 된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감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해 가격 결정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리베이트와 같은 음성적인 비가격적 요소가 가격의 하락을 막고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면서 가격의 하방경직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 원칙이 관철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가격의 경직적 움직임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사점

단기적인 물가압력은 그때그때의 여건에 따라 호전될 수도, 악화될 수도 있다. 예컨대 경기가 갑자기 가라앉거나 날씨가 정상화되면 물가압력이 낮아지게 된다. 문제는 국내외 경제의 추세와 구조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물가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물가 우려는 우리 경제가 개방도가 매우 높은 신흥국이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비롯된 바 크다. 유가와 같은 에너지 가격의 장기적 상승세는 외생변수로 주어져 에너지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물가에 직격타를 던진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안요인이 확대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과 상관없이 원화가격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수입물가가 오르게 된다. 한편 제조업이 발전한 신흥국이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기팔라질 소지가 있으며 후진적인 유통구조 역시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인구고령화와 생산기능인구 감소 등의 중장기적인 물가하락 요인도 있지만 이는 구조적인 물가상승 요인에 암도될 전망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OECD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단순히 이러한 흐름을 연장해도 중장기적으로 물가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설혹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갈망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기적인 물가상승 요인에 대해 금리 인상과 같은 수요조절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경제의 구조변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상 단시일내에 개선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유가 충격에 대해 민감도를 낮추는 동시에 유가상승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 가능성 줄여 대외경제부문의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서비스 부문의 가격상승요인을 완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는 등 내수를 확충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대외의존도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금융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외환시장의 불안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제체질의 효율성 제고도 요구된다. 상품과 서비스 유통구조의 경쟁을 촉진하고 복잡한 유통단계를 단순화시키는 등 구조적인 물가 악화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그 예가 될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OECD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장기적인 물가압력을 낮추기 위한 노력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여건에 쉽게 흔들리는 취약성을 극복하고 거시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